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도내 국립농악박물관 건립 절실”

한완수 의원, “전통 이어갈 확고한 기반 완성시켜야”

전북도내 국립농악박물관 건립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한완수(임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농악박물관 조성을 통해 전북 농악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기반을 완성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우리지역의 농악은 전문 직업으로 걸립농악부터 주민참여형의 마을농악 등 호남농악의 다양성과 예술성을 증명해주는 좌도의 쟁가리 가락과 우도의 장고가락이 온전히 전승되고 있다”고 건립 당위성을 제기했다.

현재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로 전국에 총 34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전북은 가장 많은 7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무형문화재는 총 6개 중 2개가 전북 지역의 농악이며, 최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예고를 거쳐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통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인 남원농악까지 더하면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악 명인의 반열에 오른 부안의 고(故) 나금추 명인과 정읍의 유지화 명인을 필두로 한 여성농악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농악 전통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총 34개 농악 가운데 전북은 가장 많은 7개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20%가 넘고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는 총 6개 중 2개가 전북 지역의 농악”이라며 “여기에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통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인 남원농악까지 더하면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듭 건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에 한완수 의원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화예연구기능, 전국 농악의 형식과 내용을 집대성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가능, 대중들에게 농악의 진수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기능 등이 망라된, 유일무이의 국립농악박물관을 전북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22년째 1745원”

김희수 의원 “지역 따라 차별급식 받아”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어린이집 급식비를 해마다 동일하게 지원해 심각한 먹거리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 의원은 17일, 제3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며 “실제 정부 지원보육료에 포함된 어린이집 급·간식비(점심+간식 2회)는 1인당 1일 1745원으로 22년째 동결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 보육료에 도내 14개 시·군이 지역 재정 여건

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별 재정에 도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차별된 급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내 어린이집 1일 1인당 급·간식비 현황에 따르면, 14개 시·군중 정읍시와 완주군이 2245원으로 가장 높았다.

순창군 2145원, 임실군 1945원, 무주군 1895원, 전주시 1845원이며, 나머지 8개 시군지역은 174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4만5232명 가운데 82.3%가 1745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 셈.

하지만, 이 같은 금액은 전북경찰청 직장어린이집 3681원, 전북도청 직장어린이집 3270원, 공립유치원 3045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



며,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6391원)과 비교해서는 4배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의원은 “영유아보육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출산율을 운운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북도가 급식비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별 어린이집 급식의 차별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생 직무인턴 실습기간 조기 종료... 운영 개선해야”

이명연 의원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학생 직무인턴 실습비 늦장 지급과 실습기간 조기 종료 등 행정편의주의에 염증 경고와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하반기 운영(7월 1일~8월 30일)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4일간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습기간을 조기 종료(8월 22)하겠다고 통보를 보낸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턴학생들의 실습비는 중

료 후 10일 내 지급해야 하고 민일 휴일 등으로 10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전일로 앞당겨 지급해야 하나, 서류미비, 주말 회계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3일이 지난 8월 13일에야 지급했다며 사업 예산 계획의 오류와 무사안일한 태도를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와 4대보험, 주휴수당 등 사업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회계부서 등의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검토절차조차 없는 것인지의 우려가 든다며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예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검증절차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타 부서에서도 예산을 수립·집행 시 전문지식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면 국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산전문부서의 철저한 검토절차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소비촉진 위해 알리페이 가맹점 확대”

김이재 의원, “도내 음식점 등에 적극 도입 필요”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도내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 및 관광객 등의 소비촉진을 위해 알리페이 가맹점 확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이후 돌아섰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도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에서 나서 가맹

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알리페이의 경우 중국내 9억 명에 달하는 가입자와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점유율 80%이상(2018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제시스템”이라며, “현재 공항과 면세점, 동대문과 명동, 남대문 등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가 잦은 곳에서 알리페이 등의 모바일 결제가 도입돼 있지만 도내의 경우 알리페이 가맹점이 손에 꼽을 정도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은 알리페이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교통수단이나 택시, 백화점, 로드숍 등에서 주로 알리페이를 사용되고 있어 정보부터 확인하고 한 국관광을 시작하고 있어, 중국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알리페이 가맹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성 기자

“콘텐츠가 미래 먹거리... 3년간 1조원 추가 투자”

문 대통령,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보고대회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인재캠퍼스는 우리 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의 요람”이라며 “이곳에서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보고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문화 후진국을 벗어나 콘텐츠 강국이 된 것은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기업이 정신을 갖고 도전한 수많은 창작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이 날개를 달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앞서 콘텐츠 산업 전시부스인 레티널 부스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도 새로운 스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콘텐츠 기업보증’을 확대해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홀로그램,

가상현실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비롯한 실감콘텐츠를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도입하고 활용을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류를 활용해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우주중소기업 소비재 산업의 한류 마케팅 기회를 늘리고 한류 상품공급장 확충 등 한류 콘텐츠를 관광자원화 해 한류 관광객 유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민중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긴급대책회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경기에서 국내 첫 발생 따라 전북도, 총력 방역 나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전북도가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방역에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전북도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도 파주의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종 가축전염병이자 치료제 및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소식에 전북도는 도시사를 분부장으로 하는 전북도방역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는 등 예방에 나섰다.

도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

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하는 한편, 도내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고창과 김제, 순창, 익산, 진안, 부안 등 6개 지역이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또 도내 돼지농가에 경기도 발생현황과 이동금지 내용을 담은 SNS문자를 전파하고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북지역은 올 1분기 현재 802호 돼지농가에서 132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건의안 채택

김종식 도의원 발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17일 제36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모와 가족이 82%였고, 활동지원사 같은 공적돌봄 제공자는 14%에 불과했다. 즉, 발달장애인이란 이유로 그 가족이 평생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가족 중 누구 한 명은 직장 생활과 여가, 가족행사 등 일체의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질적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실현과 관련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것.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 촉구 건의안에는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 인원을 전면 확대 및 하루 8시간 활동을 보장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참여하는 민관협업체를 즉각 구성 및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이 있다. /김진성 기자

민중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긴급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신영대 위원장이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로 위촉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신 위원이 연세대학교 미래도시와 사회연구원 객원교수로 임명돼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영대 위원장은 그동안 꾸준히 군산지역의 비전 개발과 함께 새만금 개발에 대해 남다른 소신을 갖고 미래도시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연구와 활동을 병행해왔다. 신 위원은 “객원교수 위촉을 계기로 군산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 도시로의 비전에 대한 저의 고민과 연구가 더욱 깊고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신 위원은 전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학교 ‘미래도시와 사회연구원’은 대학차원적 미래도시를 연구하는 총장 직속 연구기관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